

## 한국 근대 서구 국가사상 수용에서의 정치체제 유형과 자연권

정혜정

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 서론

1. 개화기 신국가수립운동의 국가사상에 대한 평가와 검토
  - 1.1 ‘국가주의’ 프레임의 비판적 검토
  - 1.2 유길준이 주장한 ‘입헌군주제’의 재검토
2. 근대국가사상의 수용에서 ‘국가’ 개념과 정치체제의 유형
  - 2.1 ‘국가’ 개념의 수용과 변용
  - 2.2 정치체제의 유형과 유기체적 공화체제
3. 국가사상 수용에서 자연권
  - 3.1 자연권과 천연성
  - 3.2 자연법과 인정법에서의 권리

### 결론

## 서론

개화기 한국이 서구 국가사상을 수용한 것은 중국과 일본을 경유한 것이었고, 언론매체나 유학생을 매개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1883년의 『한성순보』는 서구 정치체제를 최초로 소개하였고, 일본과 미국에 최초 유학생으로 갔던 유길준의 『서유견문(1895)』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가해졌다. 이는 구미 각국의 사정을 소개하는 가운데 정치체제의 유형을 언급한 것으로서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미간행 저술로서 1885년에서 1892년 사이에 집필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치학』은 한국 최초의 근대정치학 저술이라 할 수 있다.

한석태는 이를 두고 “일체의 정치활동이 엄격히 규제됨과 동시에 정치현상에 관한 연구 활동조차 부자유스러웠던 한국의 근대정치학은 그 시작에서부터 대상없는 정치학 혹은 객체적 정치학이 되었다.”<sup>1)</sup>고 비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길준의 『정치학』을 “전문적인 정치학 교과서로서 국가론, 정치사, 정치사상사 등 다방면에서 정치이론을 체계화”한 최초의 저술로 평가했다. 물론 이는 블룬칠리의 『일반국가학』의 일역본인 가토 히로유키의 『국법범론(國法汎論)』을 중역한 부분도 있지만 유길준 자신의 관점에 바탕하여 한국이 지향해야할 정치체제를 나름 제시한 것이었다.

한편 서구 국가사상의 수용에는 전통적 개념이나 시대적 상황이 교차되는 것이므로 변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변용을 첨예하게 드러내는 것이 국가, 권리, 자연법, 자유, 공화 등의 번역어였다. 자연법은 천연적 성법(性法)으로 번역되어 동양적 심성론에 빗대어 이해되었고, 자연법에 명시된 자유라는 것도 전통 개념인 자유자제로부터 그 이해의 근거를 두었다. 국가 개념 또한 ‘家’의 집합개념을 통해서 형성되었고, ‘권리(right)’는 초기에 권의(權義), 혹은 통의(通義)로 번역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한·중·일 동북아 3국의 서구 국가체제론 수용과 전개양상을 비교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서 1900년대 한국의 신 국가설립운동에서 서구 정치체제가 어떠한 맥락에서 논의되었고, 국가와 관련된 다양한 개념들이 어떻게 수용되며 이해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먼저 유길준을 중심으로 그가 논의한 서구 정치체제

---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3068753)

1) 유길준, 한석태 역주, 『유길준, 「정치학」』, (마산: 경남대학교출판부), 1998, 3.

의 유형을 분석하고, 자연권, 국가, 권리 등 각 개념의 용례를 추적하여 서구 국가사상이 한국에 어떻게 수용·변용되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 1. 개화기 신국가수립운동의 국가사상에 대한 평가와 검토

### 1.1 ‘국가주의’ 프레임의 비판적 검토

개화기 한국에 수용된 서구 국가사상은 루소의 사회계약론보다는 블룬칠리(J. C. Bluntschli, 1808-1881)의 유기체적 국가론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는 블룬칠리를 주목했던 일본의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나 중국의 양치차오(梁啓超)의 영향일수도 있지만 동아시아 삼국이 공통적으로 갖는 시대 인식과 감성적 차원에서 선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 연구는<sup>2)</sup> 블룬칠리에 바탕한 국가수립운동을 국가주의적 유기체사상으로 비판함과 동시에 전근대적 성격으로 규정하여 이를 폄하해왔다. 특히 유길준의 『서유견문』이나 헌정연구회에서 발간한 『국민수지』를 논거로 삼아 당시 한국인들이 논의했던 국가론이 ‘전체와 통일을 강조’했고, ‘개별 시민이 아닌 전체로서의 국민’과 ‘국가 단일성’을 조장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여기에는 시민사회의 이해관계나 시민 개개인의 관심사가 무시될 소지가 상존했다고 비판하였다.<sup>3)</sup>

요컨대 이 시기 국가사상의 수용과 전개는 서구 국가주의로서 전제정치와 다를 바 없는 ‘국민 없는 국가’였다는 평가가 대세를 이루고 있고, 신 국가수립운동도 의미 있게 주목하지 못했다. 당시 국가유기체설이 유행하고, 입헌군주제가 선포된 이유로 “지배층의 사고를 반영하여 우민관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지배층 위주의 개혁방안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았다.<sup>4)</sup>

2) 이와 관련한 연구로서는 김도형, 『대한제국기의 정치사상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1994); 김동택, 「중세적 인식론의 전환과 새로운 담론의 모색: 근대 국민과 국가개념의 수용에 관한 연구」, 『대동문화연구』 41, 2002; 김효전, 『근대한국의 국가사상: 국권회복과 민권수호』, (서울: 철학과현실사, 2000); 박찬승,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성립의 역사』, (과주: 돌베개, 2013); 김경희, 「서구 국가사상의 수용과 건국헌법」, 『오토피아』, 31, 2016 등이 있다.

3) 김경희, 「서구 국가사상의 수용과 건국헌법」, 44.

4) 김도형, 『대한제국기의 정치사상연구』, 103-108.

일본을 통해 독일식 정치학을 수용한 이들은 개인이나 인민 중심의 계약론보다는 유기체로서 국가의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군주 중심의 왕정을 사고하였다.<sup>5)</sup>

또한 박노자는 개화기 유교사회가 국민국가로 나감에 따라 모두가 애국의 주체가 될 권리를 얻었지만 과거 정심수기(正心修己)의 자율성은 부여되지 않았고, 대신 모험진취 정신이나 상무정신이 차지하게 되면서 천편일률적으로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 되었다고 말한다.<sup>6)</sup> 그리고 이것이 박정희 시대 국가주의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즉 개화기 신국가수립운동은 자율성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이었고, 정신적 통합만 강조된 국가주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 수용된 블룬치리의 국가유기체설은 주체적인 수용을 띠고 전개되었다. 당시 신국가수립운동을 활발히 벌였던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대한협회, 각종 학회의 활동을 살펴 볼 때, 이들이 우민관에 기초했다기보다는 민권운동에 입각한 계몽에 주력한 것이었고, 자유권의 권리를 강조했으며 정부혁신을 절실히 요구했다. 개화기 블룬치리의 국가유기체설 수용은 단결과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방편으로 받아들인 것이지 그것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었다. 일제 침략이 본격화되고 국가존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선의 정치를 개혁하고 시급히 새로운 국가체제의 건설을 희망하는 발로에서 주목된 것이 블룬치리의 국가론이었다. 이는 결코 국가주의로의 이행이 아니었다. 당시 루소의 계약론적 국가론보다는 유기체적 국가론을 선호한 것도 국권의 힘이 미약했던 상황에서 힘의 결집을 위한 선택이었다.

또한 국가와 인민의 관계에서 개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국가주의를 표방하거나 군주와 인민을 머리와 몸통에 배당시켜 수직적 위계의 유기체를 설정한 것이 아니었다. 원래 블룬치리가 말하는 국가유기체론은 국가를 인격체들이 얹혀 있는 하나의 구성물로 보는 것이고, 그 실제 토대는 인민이며 인민이란 분산된 다수 개인이 아니라 정치적 지체로 정렬되는 총체였다. 그리고 그 총체 가운데에서 우두머리는 최상위 일원이 되고 개개의 지체는 각각의 본성에 걸 맞는 지위와 과제를 지니는 위계적 형태를 띠었다.<sup>7)</sup>

그러나 당시 신국가수립운동의 주도했던 지식인들은 민권회복에서 국권회복을 찾았고

5) 김경희, 「서구 국가사상의 수용과 건국헌법」, 46.

6) 박노자, 「국가 유기체론과 개명전제(開明專制)」, 『인물과 사상』 83, 2005, 85.

7) Johann Caspar Bluntschli, *The Theory of the State*, (Kitchener: Batoche Books, 2000), 24-26.

개인의 성장에서 국가의 성장을 찾았다. 분명 블룬칠리의 학설이 대세를 이루었지만 이를 번역한 정인호나 나잔김상헌 등에 의해서 소개된 블룬칠리의 학설에는 해석적 변용이 가해졌다. 그리고 오상준은 동학(천도교)에 바탕하여 국민주권의 공화체제를 재구성하였다.<sup>8)</sup> 당시 지식인들이 생각했던 국가사상은 ‘국민없는 국가주의’가 아니라 개인의 권리의식에서 국가주권을 회복하는 민권운동의 성격이 강했다. 즉 국가와 국민의 관계가 ‘머리와 지체’의 관계가 아니라 ‘뼈와 살’의 관계로서<sup>9)</sup> 유기체적 공화의 단결로 힘의 결집을 도모하고자 했던 맥락이 컸다.

국민이라는 것은 그 혈통, 역사, 거주, 종교, 언어의 동일함 이외에 또한 반드시 동일한 정신을 가지며 동일한 이해를 느끼며 동일한 행동을 하고, 그 안에서의 조직은 한 몸의 골격과 같고, 그 밖에서 발휘되는 정신은 한 군대와도 같은 것이다.<sup>10)</sup>

요컨대 개화기 각종 학회나 언론·출판활동에서 유기체적 국가사상이 강조된 것은 국권 회복과 신 국가건설이 절실했던 시대적 요청에서였다. 블룬칠리의 책 한권이 영국의 정치개혁을 이룬 것처럼<sup>11)</sup> 조선의 정치를 개혁하고 국망의 위기를 타개할 신 국가 수립의 정치사상으로서 블룬칠리의 국가사상이 활용되고 변용되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1.2 유길준이 주장한 ‘입헌군주제’의 재검토

1900년대의 국가수립운동은 민권운동과 국가사상의 고취가 그 핵심을 이룬다. 개화기 당시 논의된 국가체제는 전제체제, 입헌군주제, 민주공화제였는데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기존 연구는 유길준의 『서유견문』(1895)과 헌정연구회의 『국민수지』(1904)를 예로 들어 개화기 한국이 선호했던 서구 정치체도가 입헌군주제였다고 주장했다. 유길준이 선호한 입헌군주제는 전근대적이고 전체적인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인민을 정치

8) 참조: 오상준, 『초등교서』, (경성: 보문관, 1907). 당시의 국가사상은 오상준, 정인호, 나잔김상헌뿐만 아니라 유성준, 안중화, 설태희, 김성희 등 여러 인물의 저술을 통해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이 모두가 블룬칠리를 기반으로 자역술한 것이지만 각자가 주체적인 관점을 드러내었다.

9) 김성희는 “국가는 유기체적 조직”이며 “인민의 근육과 관절이 집합하여 착종된 구조”라 하였다. 김성희, 「독립설」, 『대한자강회월보』 7, 1906, 15-16. 오상준의 경우도 인민과 국가를 뼈와 살의 관계로 놓은 바 있다.

10) 「민족과 국민의 구별」, 『대한매일신보』, 1908. 7. 30.

11) 오상준, 『초등교서』, (경성: 보문관, 1907), 115.

적 주체로 상정하지 않았으며, 인민의 정치참여를 긍정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sup>12)</sup> 특히 유길준은 군주의 전권을 용인하는 군주제에 애착을 보였고, 인민이 정부의 권한을 공유하는 것에 비판적이었으며, 공화정치를 용인할 여지도 없었던 사람으로 평가된다.<sup>13)</sup>

그러나 유길준의 주장을 잘 살펴보면 명칭만 입헌군주제이지 내용은 민주공화적 성격이 강하다. 즉 “민주공화 체제는 세습하는 임금만 없을 뿐이고 입헌군주 정치체제와 같다.”<sup>14)</sup>고 보아 그는 민주공화를 입헌군주제에 덧씌웠다. 유길준은 분명 군주의 시혜에 의존하는 혜정(惠政)이 아닌 공평한 도리를 실천하는 미정(美政)을 강조했다.<sup>15)</sup> 군주의 혜정은 애민의 정치로서 정치 주체가 군주라면, 미정은 정부와 인민이 동심협력해서 이루는 정치이다. 이는 군주의 덕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 도로, 건설, 학교설립 등의 공공사업을 통해 나라의 안녕과 문명개화를 실현하는 정치이다. 정부는 인민과의 ‘합심일체’, ‘衆心의 일체’를 기초로 삼고, 사람의 도리를 지켜나가는 목적을 위해 정부의 권세를 사용한다. 또한 나라를 설립한 것도 군주가 아니라 인민이고, 제일 높은 지위와 대권은 오직 인민이 뽑은 군주에게 주어질 뿐이다.<sup>16)</sup>

독립하는 권리, 산업의 권리, 입법의 권리, 외국과의 교섭통상의 권리, 외국과 강화조약체결의 권리, 중립의 권리 이 모두가 모든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주권독립국의 권리로서 주권은 군주가 아니라 인민에게 주어지고 단지 그 권한은 통치자에게 위임된다. 그리고 나라를 보호하고 지킬 책임과 권리는 인민에게 있다.

어떠한 나라나 인민이든지 그 국헌이 정한 체제나 예규 여하를 관계치 않고, 그 나라를 자주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주권 독립국이다. 주권은 한 나라를 관제하는 최대의 권리니, 나라 안팎으로 실시한다. 나라 안에서 실시하는 주권은 그 나라의 커다란 법과 원리에 의하여 인민들에게 주어졌으며, 통치자에게 맡겨져 있다.<sup>17)</sup> [...] 현 체제를 유지하고 자기 나라를 스스로 보호하는 권리는 결국 (자기 나라를) 자기들 스스로가 지킨다는 뜻이니 온 나라 인민들이 하나같이 책임져야 할 일이다. (이 권리가) 모든 권리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정부의 방향과 능력을 지켜 받드는 것이 옳다.<sup>18)</sup>

12) 유길준, 장인성 옮김, 『서유견문』, (서울: 아카넷, 2017), 64.

13) Ibid., 345-351.

14) 유길준, 김태준 옮김, 『서유견문』, (서울: 박영사, 1976), 165.

15) 유길준, 장인성 옮김, 『서유견문』, 65.

16) 유길준, 허경진 옮김, 『서유견문』, (서울: 서해문집, 2004), 103.

17) Ibid., 109.

유길준이 말하는 군주는 대통령과 큰 차이가 없다. 정부 제도의 목적은 “국민들이 마음을 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그 권세로 사람 된 도리를 보전하는 데에 있다.”<sup>19)</sup> 유길준이 선호했던 입헌군주정체는 민주공화제를 혼용시킨 성격이 강하다. 당시 국권의 위기 상황으로 볼 때 고종황제의 대한제국을 전복시키는 것보다는 군주와 인민이 함께 통치하는 군민동치를 자연스럽게 표방하면서 민주공화를 내포하는 입헌군주제를 주장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1905년 을사늑약 이후 고종황제의 권한이 약화되면서 법률관계 논설이나 저술에서는 오히려 입헌군주제보다 민주공화제가 더 강조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20)</sup>

또한 헌정연구회가 발간한 『국민수지』 역시 전근대적 입헌군주제를 이상으로 한 것이라 비판되었다.<sup>21)</sup> “국가의 문제가 황실이나 정부의 문제이지 국민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인민 또한 국가주권과 관련이 없는”<sup>22)</sup> 군주제를 주장했다는 것이다. 특히 김동택은 국민수지를 “국민 없는 국민”, “국민의 국가가 아닌 국가의 국민”, “군주 한 개인의 국가주의 선동 책자”로 규정했다. 그러나 국민수지 서문에서 “국가는 국민 모두의 공동체로서 군주 1인의 사유물이 아님”을 강조한 바 있고, 군주보다 인민이 우선되며 군주의 멸망은 곧 나라의 멸망이 아니라 국민과 국토가 박탈당할 때 비로소 국가의 멸망이라 하여 국민을 국가의 주체로 보았다.<sup>23)</sup> 분명 『국민수지』는 국가란 “중민(衆民)의 합성체(合成體)”요 주권은 “衆民의 합성력(合成力)”이라 하여 국가가 민중으로부터 비롯됨을 강조하였다. 국민수지는 당시 망국의 위기 상황에서 “국민주권의 권리를 수호하여 국권을 회복”하고 그리하여 “독립국의 지주인”<sup>24)</sup>이 될 것을 호소한 민권운동의 책자라 할 것이다.<sup>25)</sup>

18) Ibid., 106.

19) Ibid., 167.

20)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체제에서 민주공화제를 대놓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 이면에는 공화제에 대한 끊임없는 소개와 중시가 있었다. 을사 늑약 이후는 민주공화체제가 표면에서 재개되었음을 역력히 볼 수 있다.

21) 이와 관련한 연구로는 김동택의 연구 외에 최기영, 『한국근대계몽운동연구』, (서울: 일조각, 1977)

22) 김동택, 『국민수지를 통해 본 근대 국민』,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근대 계몽기 지식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서울: 소명출판, 2004), 208-219.

23) 헌정연구회, 『국민수지』, 1904, 제1장; 현재, 『유년필독』,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7)에 수록.

24) 현재, 『유년필독』, 38-40.

25) 참조: 이진상 외, 『일본의 근대화와 조선의 근대』, (서울: 모시는사람들, 2013), 129-140.

## 2. 근대 국가사상의 수용에서 ‘국가’ 개념과 정치체제의 유형

### 2.1 ‘국가’ 개념의 수용과 변용

본래 국가란 하나의 역사적 관념의 소산으로서 모든 시대와 모든 민족에 통하는 정치적 질서형식의 통상개념으로 말해진다. 그러나 한국과 같은 동양전통에서 개화기 국가 개념은 가족(家)이 모여서 ‘하나의 큰 집’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되었다.<sup>26)</sup> 신채호는 “국가란 가족 두 글자를 대서(大書)한 것에 불과하다”<sup>27)</sup> 하여 국가를 하나의 대가족으로 인식하였다.

국가란 곧 한 집 족속을 크게 말한 바라 [...] 시조 단군이 태백산에 탄생하샤 이 나라를 개창 하샤 후세 자손에게 주시니 삼천리 강토는 그 집 산업이며 4천년 역사는 그 집 족보이며 역대 제왕은 그 집 종통이요 지경을 둘러싼 산하는 곧 그 집 울타리이라. 오직 이천만 자손이 여기서 나서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함께 살고 여기서 함께 의지식지하고 여기서 웃고 슬퍼함을 함께 하나니 집과 나라가 무엇이 다르리오 저 명군 어진 재상 영웅 호걸은 이 가를 지키는(保家) 肖子요 獨夫, 간신, 부패한 관리(贓吏)는 곧 패가시킨 悖孫이며 을지문덕의 싸움과 양만춘의 외적을 물리침은 家의 難을 구한 자이며 [...] 현재 국민의 조상되는 古人이 선인을 심든지 악인을 심든지 그 결과를 먹는 자는 모두 古人의 자손되는 현재국민이다. 미래 국민의 조상될 금인이 선인을 심든지 악인을 심든지 그 결과를 먹는 자는 또한 모두 금인의 자손되는 미래 국민이라. 그러므로 국가는 곧 하나의 큰집 족속(壹大家族)이라 하는 바니 [...] <sup>28)</sup>

국가란 하나의 큰 집안이다. 단군의 탄생과 개천(開天)의 수 천년 역사는 우리의 족보가 되고, 역사의 영웅호걸들은 우리 집안을 지킨 자들이 되며, 패악의 무리들은 우리의 집을 패가시킨 자들이 된다. 국가는 한 가족, 한 울타리(집)로서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곳으로서 유기체적 국가이다. 안중화 역시 불문철리의 국가학을 소개하면서 국가라는 이름이 처음에 일가(一家), 일족(一族)에서 나온 것에 빗대어 국가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오늘날의 문명제국은 모두 인민의 국가이므로 “國中の 民이 합하여 일체를 이루고(合成一體) 스스로 그 이치를 판단하고 스스로 그 뜻을 마땅히 하며 스스로 그 정치를 행하는 것”<sup>29)</sup>이

26) 김효전, 『근대 한국의 국가사상: 국권회복과 민권수호』, (서울: 철학과현실사, 2000), 118.

27) 신채호, 「역사와 애국심의 관계」, 『대한협회회보』 2, 1908.05, 5; 단재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 편, 『단재 신채호 전집』 6, (천안: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28.

28) 「國家는 卽一家族」, 『대한매일신보』, 1908. 7. 31; 『단재 신채호 전집』 6, 278-279.

29) 伯倫知理著, 안중화 옮김, 『國家學綱領』, 1907. 이 책은 양계초(1880-1932)가 번역한 것을 안중화가 다시 우리말과 한자를 섞어서 역술한 것이다.



라 하였다. 그 역시 불륜칠리에게서 국가개념을 가져왔지만 그가 제시한 국가개념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한 것은 아니었다. ‘國’은 일정한 영역, ‘家’는 만 가족(萬姓)의 결합을 뜻하는 겨레(동포)를 의미했다.

또한 가족의 확장으로서 국가개념은 전통 유가가 말하는 가족주의의 가족개념과는 다르다. 기존의 家는 유가적 가문중심의 가족주의였다. “삼천리 강토가 물에 빠졌을진대 내 한 집만 안보하기 어렵고, 인민을 몰아다가 맹렬한 불 속에 던져놓고 나의 한 목숨만 온전하기를 구할 수 없는 것인데, 한국 사람은 배안에서 풍랑을 만난 이 시대를 당하여도 오히려 가족의 사상만 뱃속에 가득하다.”<sup>30)</sup>는 것이 당시의 가족주의에 가했던 신채호의 비판이다. 즉 사람들이 자기 가족에만 매몰되어 국가의 안위를 묻지 않고, 자기 한 집안만 무고하기를 바라는 가족주의로 이천만의 인구를 이천만의 각 나라로 분열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국민의 단결이나 협력은 말할 것도 없고, 동포사상도 발달할 수 없다.

신채호가 국가 개념으로 제시했던 대가족주의는 자기만의 가족이 아닌 ‘큰 국가의 가족사상’이었고, 한 집의 조상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집의 조상되는 단군을 위하며, 한 집 자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조상, 단군의 모든 자손까지 사랑하는 가족주의를 의미했다.<sup>31)</sup>

한편 『국민수지』에서 말하는 국가 개념이란 “일정한 토지에 사는 인민이 서로 결합하여 이루는 겨레공동체”<sup>32)</sup>였다. 원래 전통적인 개념으로서 ‘國’이란 울타리(영토)가 아니라 ‘君’을 의미했다. 군주는 나라님이라 불렀고 “나라에서 하신말씀, 나라에서 하실 일”이라 하여 나라일은 나라님이 하는 것이지 민중이 할 일이 아니었다. 민중들은 나라일이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생각했다. 의암 손병희는 『준비시대(1906)』를 저술하여 민중들이 나라일을 군주의 일이라 여기고 자신과 무관하게 생각하는 인식을 타파하려 하였다. “국가라는 것은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공유하는 바”이고, “국가의 일이 국민 자신의 일”이라는 국가관념을 고취시켜 나가기 위해 국가를 강조했던 것이다.

夫國家者는 一人의 私有한 바 아니요 乃萬民의 所共한 者인 故로 國家之事는 卽國民自家의 事이어늘 奈何로 一部政府人에게만 委託하고 傍坐視之라가 事之不舉에 至하야 乃起而責之호

30) 「가족 사상을 타파함」, 『대한매일신보』, 1908. 9. 4; 『단재 신채호 전집』 6, 289.

31) 「가족 사상을 타파함」, 『단재 신채호 전집』 6, 289.

32) 『국민수지』, 1-2. 김효전, 『근대 한국의 국가사상: 국권회복과 민권수호』, 422-431에 수록.

되 는는 爾之罪也라 하리오<sup>33)</sup>

당시 국가와 애국이라는 말이 넘쳐났던 것도 민중들로 하여금 정치의 주체로 나설 것을 촉구함이었다. 신채호도 정치적 국가관념이 없던 전근대의 산물을 오늘날에도 가져와 ‘군주’와 ‘國’을 일치시키려는 자가 많다하여 이를 개탄한 바 있다.<sup>34)</sup> 요컨대 당시 ‘國’의 개념은 ‘君’이 아닌 한 가족(一家族)의 의미로 전환되었고, 한 가족은 공동체를 의미하였으며 동포사상은 한 개인의 가족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범주로 했다. 이는 개별적 가족주의를 타파함과 동시에 동포사상의 애국애국의 국가의식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당시 국가는 ‘한 가족’이라는 개념을 매개로 국가의식과 애국심, 그리고 동포애를 불러일으키고자 했던 맥락에서 이해되었다.

## 2.2 정치체제의 유형과 유기체적 공화체제

1883년 『한성순보』는 최초로 서구 정치체제를 소개하여 그 유형을 군주제, 입헌군주제, 공화제 셋으로 구분했다.<sup>35)</sup> 이는 어디까지나 소개였지 어느 한 정치체제를 지목하여 선호를 나타낸 것은 아니었다. 1900년대 초기 애국가장기의 신문이나 잡지 논설에서 제시된 정치체제도 보면 일반적인 소개였지 특정정체를 평가한 것은 많지가 않다. 그러나 190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점차 민주공화제가 전면에서 비중있게 거론되었다. 『대한자강회월보』에 게재된 김성희의 국가론이 그러하고 나잔김상연 역술의 『국가학(1906)』, 정인호의 『국가사상학(1907)』이 그러하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1895년 유길준은 『서유견문』에서 국가설립의 주체와 권리를 다루고, 정치체제를 5가지 유형으로 말했는데, 이 가운데서도 군민공치와 국민공화가 강조되었다.

5가지 유형이란 첫째, 군주가 마음대로 하는 정치체제, 둘째, 군주가 명령하는 정치체제, 셋째, 귀족이 주장하는 정치체제, 넷째, 군주와 국민이 함께 다스리는 공치(共治)의 정치체제, 다섯째, 국민들이 함께 다스리는 공화(共和)의 정치체제가 그것이다. 군민공치는 ‘국민이 천거한 정부 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하여 결정한 사항들을 군주가 명령하여 사무를 집행하는 체제이다. 여기서 군주의 권한은 법으로 지정된 한계가 있어 지정된 한계 밖

33) 「준비시대」, 최기영박맹수 편, 『한말 천도교 자료집』 2, (서울: 국학자료원, 2014), 296.

34) 신채호, 「君과 國」, 『대한매일신보』, 1910. 1. 29; 『단재 신채호 전집』 6, 149.

35) 『한성순보』, 1883. 11. 10.

으로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sup>36)</sup> 군주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가장 공평한 도리를 따라야 하고 비록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사사로운 감정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sup>37)</sup> 또한 국민공화제는 합중정체(合衆政體)로도 명명되었는데 이는 세습되는 군주가 없고, 정령과 법률 및 온갖 사무가 모두 군민공치(군주와 국민이 함께 다스리는 정치체제)의 정치체제와 같다.”<sup>38)</sup>고 하여 군민공치의 입헌정체와 합중정체를 동일시하였다. 그리고 국민이 함께 다스리는 공화가 가장 훌륭한 정치체제라 하였다.

군주와 국민이 함께 다스리는 정치체제는 그 제도가 공평하여 조그만 사심도 개입할 수가 없다. 국민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며 나라의 정령과 법률을 국민의 공론에 따라 시행하니, 사람마다 그러한 의논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하기를) 도리어 귀찮아할 정도이다. 국민의 수를 정하고, 가령 만 명 가운데 한 사람이라든가 십만 명 가운데 한 사람씩 재주와 인덕이 가장 높은 자를 천거하여 군주의 정치를 돕게 하며 국민의 권리를 지키게 한다 [...] 국민들이 함께 다스리는(共和) 정치체제는 세습하는 임금만 없을 뿐이고, 대강 임금과 국민이 함께 다스리는 정치체제와 같으므로 지리한 설명은 늘어놓지 않겠다. 각국의 정치 체제를 서로 비교해 보면, 국민이 함께 다스리는(共和) 정치체제가 가장 훌륭한 규범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sup>39)</sup>

결국 한 나라의 정치 체제는 언제나 그 국민들의 학식 정도에 따라 제도의 등급이 이루어진다. 유길준은 정치 체제의 종류가 어떠하든지 간에 실체는 그 나라 국민이 스스로 성취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국가유기체설에 입각하여 국민합성체로서의 유기체적 공화제를 강조했다. 기존연구는 그가 입헌군주제를 주장했다고 하지만 군주귀족평민간의 권력균형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어야 함을 분명히 말했고, 대의공화제를 높이 평가했다. 그가 중시했던 공화제는 “각개 인민이 아니라 인민전체를 주권의 본체로 삼는”<sup>40)</sup> 합중공화의 국민합치(國民合治)를 의미하였다.

또한 유길준은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의거하여 “인민이 사회적 계약으로 말미암아 자연 상태에서부터 사회적 국가로 진입한다 함”은 그 천부고유의 권리를 위임하는 대상이 1인의 군주가 아니라 “인민전체라” 하였다. 국가주권은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민전체에

36) 유길준, 허경진 옮김, 『서유견문』, 171.

37) Ibid., 171-172.

38) Ibid., 172.

39) Ibid., 174-176.

40) 유길준, 한석태 역주, 『유길준, 「정치학」』, 114.

있고, 정부는 인민총의의 집행기관에 불과하다. 그러나 루소의 계약설은 인민 전체의 희망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문제점을 들어 일정부분 비판했다. 루소의 대의공화제는 국가의 안정과 공고함을 지켜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를 창설하고 사회를 경영하였으나 공중에 누각을 건축함과 같았으며 육상에서 배를 띄움과 같았다.”<sup>41)</sup>는 것이다.

### 3. 국가사상 수용에서 자연권

#### 3.1 자연권과 천연성

종교적 관점에서 조선에 서구 자연법이 수용된 것은 가톨릭의 전래에 따른 것으로 주장된다. 예컨대 18C 말에 이미 천주교 전래에 의해 자연법의 의식이 생겨났고, 이는 천주교리문답의 신앙고백에서 양심법, 마음법으로 이해되었다. 1791년에 순교한 윤지충은 자연법을 천주의 명으로 이해하였다.<sup>42)</sup> 윤지충이 자연법을 천주의 명으로 이해했다는 것은 “천주가 사람을 자신의 모상(肖像)대로 내셨다”함에 근거를 둔 것이다. 또한 “본성에 적합한 지력(知力)과 자유의지” 뿐만 아니라 “초성(超性)은혜와 과성(過性)은혜”<sup>43)</sup>를 사람에게 부여 하였기에 천주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은혜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고 볼 수 있다. 천주교에 의한 자연법 이해의 맥락은 인간이 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천

41) Ibid., 145. 유길준은 루소가 말한 사회계약설을 역사적 오류와 논리적 오류로 나누어 말했다. 역사적 오류란 계약론이 국가의 기원과 존립을 계약에 돌리는 오류를 말한다. 역사적으로 국가가 개개인의 자유계약으로 말미암아 발생하고 생존한 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논리적 오류란 소위 정치상의 자유라는 것이 국가라는 범주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그 범주 밖에 정치적 자유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자유는 국가를 전제할 때 그 효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계약론이란 상상에 의해 다수를 전체의 대표라 이를 뿐이고 일반의지(공동의지)라는 것도 다수의 의지에 불과할 뿐이지 ‘전체의 총의’라 할 수 없다. 결국 계약론의 오류는 私人의 자유계약을 인정하는 데에 있고, 사인이 맺는 자유계약의 효과는 사권이지 공권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각 개인의 의지의 합계는 의견의 집합이지 일반의지(공동의지)가 아니라는 점으로 요약된다(Ibid., 146-147). 따라서 국가성립의 기원은 계약이 아니라 인류 고유의 성질 가운데서 발견되는 공동적이며 통일적인 추세와 방향이 점차 발달하여 사회생활과 국가기관을 형성하게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자 국가유기체설에서 주장하는 바이다. 유길준의 사회계약설 비판과 국가유기체적 입론은 불문철리의 일반국법 제4편 국가의 성장과 쇠퇴, 제9장(계약론)과 제10장(인간의 사회적 정치적 본질로서의 의식)을 중역하여 논의한 것이다.

42) 최종고, 『한국의 서양법 수용사』, (서울: 박영사, 1982), 412.

43) 노기남 편집, 『漢文問答』, (서울: 가톨릭출판사, 1959), 25-26. 여기서 초성은혜란 성총(聖寵)과 성덕(聖德)으로 인하여 사람이 천당영복을 누릴 자격을 얻게 되는 은혜를 말한다. 그리고 과성은혜란 사람이 사욕편정(邪慾偏情)이 없어 지혜가 밝고 고통이 없으며 죽지 않는 은혜를 말한다.

주성이 인간에게도 부여되어 있고 이로 말미암아 고통과 죽음이 없는 천당으로 들어가는 것이기에 자신에게 부여된 천주의 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권리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법률차원에서 자연법이 처음 소개될 때는 유가의 용어가 차용되었다. 당시 소개된 국제법 관계 문헌에서는 자연법이 ‘성법(性法)’으로 번역되어 조선에 유포되었는데, 性은 『중용』에서 “하늘이 명한 것을 性(天命之謂性)”이라 말한 것처럼 이는 곧 하늘이 부여한 인간 본성을 뜻했다. 또한 『만국공법』에서는 모든 나라의 자연권이 곧 자주와 평등의 권리임을 소개하였다. 대체로 자연법사상은 인권을 천연성의 의미로 이해되어 개화자 강사상가들에 의해 보급되었다. 한편 1900년대에 오면 자연법은 사람의 권의(權義)로 이해되었는데 설태회는 “무릇 하늘이 民을 낼 때에 자유를 균등히 부여하고, 세계에 국가가 생길 때에 각각이 독립하였다.”<sup>44)</sup> 하여 ‘천강생민(天降生民)’의 전통적 용어 위에 “민의 자유”와 “국가의 독립”을 하늘이 내린 권리라 하였다.<sup>45)</sup>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자연권이 民의 자유뿐만 아니라 국가독립도 포함하는 천부권’이라는 점이다. 자연권은 인간에 내재된 천성과 맞물려 있고, 한 개체가 국가와 한 몸을 이루기에 이는 곧 유기체적 국가이해를 낳게 된다. 그러나 당시 한국은 그 권리를 잃은 지 오래되었고 억압정치의 확정 속에서 노예처럼 살아온 것이 현실이다. 자유의 상실은 곧 국가의 권리도 잃는 것이기에 그는 ‘국망의 위기가 자유의 상실에서 온 것’임을 토로하였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의 법률은 중국의 형률을 모방함”에 불과하고, “도덕으로만 내면의 심의(心意)방면을 지도할 뿐” 법률로써 외부 행위를 규범 짓는 것이 지극히 박약하다<sup>46)</sup> 하여 “우리 民은 타성(惰性)을 이루고 정치는 압제로 기울어 공리(公理)를 잃었다”고 비판하였다. 인민이 타성에 젖음은 천부의 성정을 활용하지 못한 까닭에 있고, 애국심의 자멸을 낳기에 사람이 천부권의 자유를 부여받아도 이를 누리지 못한다면 권리라 칭

44) 설태회, 「拋棄自由者爲世界之罪人」, 『대한자강회월보』 6, 1907, 19.

45) 당시 국가의 독립권은 “천부공권(天賦公權)”으로 지칭되기도 하였다. 中岳山人, 「法律을 不可不學」, 『대한협회회보』 7, (경성: 대한협회, 1909), 33.

46) 최석하도 당시 한국에 법률이 없다고 하는 근거를 세 가지로 들었다. 첫째는 문명국의 법리와 비교해 볼 때 법률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유치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법률이란 본질상 권력자의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국가 생존발달에 필요한 기준이므로 악한 명령과 폭력적인 조규는 법률의 형식을 구비하였더라도 법리상 법률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로 법률은 국가 자율에 관한 것인데 현금 일제통제하의 법률은 자율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꼽았다. 최석하, 「韓國法律觀」, 『대한학회월보』 4, 1908, 50-51.

할 것도 없다는 것이다.<sup>47)</sup> 그러므로 그는 법률이 있어야 천부권도 보유(保有)되는 것이고, 현 세계문명 제국은 민주정체가 있으며 보다 다수를 이루는 것은 헌법이므로 이 헌법은 바로 현세의 대동법률이라 하였다. 그가 천부권(자연권)의 자유를 ‘천부의 성정’과 ‘독립 국가에 수반되는 애국심’으로 이해하고, 이 성정과 독립을 누리고 보호한다는 맥락에서 헌법을 “대동법률”로 칭했다는 것은 매우 독창적이다.

유길준은 인민이 권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법률과 교육이 필요함을 제기했다. 인민들의 지식이 높아지고 나라의 법령이 공평하게 시행되어 사람마다 자기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진 뒤에 모든 인민의 의기를 모아 한 나라의 권리를 지켜 나가는 것이다. 인민이 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면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해도 분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교육하는 규모를 명백히 정하여 권리의 근본을 가르치는 것도 다 이 때문이고, 법률이 분명치 않으면 인민들이 서로 권리를 침범하여 나라의 권리를 지키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업신여기는 계제를 만들게 된다. 그래서 나라의 법령은 엄격하고도 분명하기를 요구하는데, 이는 귀천과 빈부를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다루려는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다. 교육과 법률이 나라의 권리를 보전해 나아가는 커다란 근본이라는 것이다.<sup>48)</sup>

이상과 같이 근대 한국에서 서구 권리의 관념은 천부의 성정과 국권의 수호로 표방되었고, 인간이 부여받은 본성적 성정에서 우주만물의 이법과도 통할 수 있는 대동법률로서 헌법의 정신을 구가했다. 여기에는 전통적 의미의 자유자재, 즉 인간 근원의 바탕(천성)을 자각함에서 오는 자유의 개념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서구의 자유(liberty) 개념을 다사쟁론으로부터 얻어지는 ‘사고의 자유로운 활동’으로 이해했다.<sup>49)</sup> 그러나 한국전통에서 자유는 자유자재로서 하늘이 부여한 자신의 천성을 실현하고 누리는 것이었다. 자유권<sup>50)</sup>은 하늘이 부여한 천성의 회복으로부터 나온다.

## 3.2 자연법과 인정법에서의 권리

개화기 초기에 자유는<sup>51)</sup> ‘자유자재’, 혹은 ‘자주’로 번역되었듯이 권리(right)도 초기에

47) 설태희, 「法律上 人の 權義」, 『대한자강회월보』 8, 1906, 16-17.

48) 유길준, 허경진 옮김, 『서유견문』, 119-120.

49) 福澤諭吉, 『文明論之概略』, (東京: 岩波書店, 2004), 37.

50) 자유권, 자연권, 천연권은 천부인권의 번역어라 할 것이다.

51) 참고: 근대 일본의 자유 개념 수용에 대해서는 ‘石田雄, 『일본근대사상사における法と政治』, (東京:

는 국제법과 관련된 맥락하에서 권(權), 권의(權義), 통의(通義)로 일컬어졌다.<sup>52)</sup> 한국에 권리(權利)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Henry Wheaton(1785-1848)의 국제법 책을 번역한 마틴(W.A.P. Martin)의 『만국공법』(1864)이 들어오면서부터이다.<sup>53)</sup> 그러나 동양 사람들에게 이를 이해시킴에는 곤란함이 있었다. 동양 전통에서 利라는 것은 권의의 개념으로서 사용되기보다 샅된 이익으로 읽혀지는 정서가 컸다. 그래서 ‘利’보다는 ‘理’를 취했고, 일본의 경우도 ‘權利’가 아닌 ‘權理’로 사용되었으며, 후쿠자와 유키치는 ‘通義’로 이해했다. 또한 원래 영어에서 권리란 ‘정당하다’는 의미를 갖는 것처럼 권리는 “천지나 성현에게 질문할 지라도 조금도 틀릴 것이 없다”<sup>54)</sup>는 정당성으로도 간주되었다.

한편 『한성순보』에 소개된 통의의 개념은 자유의 권리를 의미하였다.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는 바꿀 수 없는 ‘공동된 의(通義)’가 있어 억조창생이 모두 같다. 이른바 공동된 의란 자유를 추구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 이치는 인력으로 제한할 수 없고 귀신도 빼앗을 수 없는 것”<sup>55)</sup>이라 하였다. 그러나 점차 1900년대로 넘어가면 권리라는 말도 다수 혼용되었다. 또한 『제국신문』에서는 자유, 평등, 자주가 권리의 개념으로서 강조되었다. “자유, 평등의 권리를 중히 여긴 후로 여자도 남자와 같은 권리가 있다는 의론이 생기고”<sup>56)</sup> “인민의 권리가 자유와 자주하는데 있으며, 자유는 제 뜻대로 행하여 남의 압제를 받지 아니함이고 자주는 제 몸을 제가 다스려 남의 관할을 받지 않음”<sup>57)</sup>이라 하였다.

결국 자유와 통의는 사람이 사람의 도리답게 사는 권리를 지칭한 것인데, 이는 가장 공평하고도 올바른 이치로서 현우분부귀천, 강자와 약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사람이 타고난 권리는 하늘이 내려 준 공도이고, 세상에 태어난 뒤에 차지하는 지위는 인위적인 구별

岩波書店, 1976), 94-95; 尾川昌法, 『人權のはじまり:近代日本の人權思想』, (京都: 部落問題研究所, 2008), 121-122.

52) 니시 아마네(西周)와 쓰다 마미치(津田真道)는 right의 번역어로서 한자 ‘權’을 사용했고,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는 ‘通義’라고 번역했다. 또한 미쓰쿠리 린쇼(箕作麟祥)는 휘튼의 저서 중국 번역본 『만국공법』에서 쓴 번역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권리, 혹은 민권이라는 말을 사용했다(尾川昌法, 『人權のはじまり:近代日本の人權思想』, 30-34).

53) 참조: 한국 개화기 자연권에 대해서는 ‘김효전, 『근대 한국의 국가사상: 국권회복과 민권수호』’와 ‘이영록, 『애국계몽운동기 자연법사상의 구조와 특징: 학회지를 중심으로, 현대법학의 이론』, 『우재 이명구박사 화갑기념논문집(III)』, 우재 이명구박사화갑기념논문집집행위원회, 1996, 701-716.

54) 『제국신문』, 1907. 7. 17.

55) 『한성순보』 14, 1884. 3. 8. 한성순보 번역판,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1983, 267. 이는 후쿠자와가 1866년에 펴낸 『서양사정』에서 따온 것이다. 전봉덕, 『한국근대법사상사』, (서울: 박영사, 1981), 82.

56) 『제국신문』, 1902. 9. 29.

57) Ibid., 1902. 10. 30.

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이치는 천자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털끝만큼의 차이도 없다. 비록 크고 작은 구별은 있지만 밖으로부터 닥치는 불의무도한 행동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안에서 일어나는 좋고 나쁨에 대한 취사선택은 본심 상 같다.

권리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권리와 지위에 따른 권리가 있다. 사람답게 사는 권리는 하늘과 땅 사이에 저마다 태어나 사람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다. 천자도 사람이고 서민도 또한 사람인 것이다. 그러나 지위에 따른 권리는 높고 낮은 서열과 크고 작은 경우가 정해지며 형세의 변천이나 득실에 따라 옮겨지거나 없어지기도 하는 실상의 겉모습일 뿐이다. 그러므로 권리는 인생의 권리와 지위의 권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사람 안에 간직된 진리이고, 다른 하나는 밖으로부터 온 세력이다. 사람의 강약은 힘의 강약이 아닌 시비로 판별한다. 만약 사람의 강약을 시비로 판별하지 않고 세력으로 정한다면 이는 새나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sup>58)</sup> 그러므로 나라들마다 법률적으로 규제를 마련하여 대중들이 이를 삼가 받들어 서로 잘사는 공도를 지키는 것이다.

한편 권리라는 것은 천생권(天生權)과 인제권(人制權) 둘로 나누어 소개되었는데, 천생권이란 모든 인민이 자기의 학식, 기력으로 성명(性命)과 재산을 스스로 보호함이다.<sup>59)</sup> 특히 권리 개념과 관련하여 인민의 권리, 민권개념도 정착되었는데, 민권은 자유의 권리로써 국권이라는 말과 동일시되었다.<sup>60)</sup> 설태희뿐만 아니라 유길준 역시 자연권을 천성으로 이해하였다. 천성은 천연과 인위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했는데, 천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히 생겨나는 것으로서 동요되거나 고쳐지지 않는 것이고, 인위란 인간의 지혜로 법률을 세우고 그에 따라 나아가거나 물러나는 것이다. 즉 천연은 사람이 타고난 것이고,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올바른 이치를 말하고, 인위는 인위적으로 만든 법률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거지를 바르게 하려는 것이다.<sup>61)</sup> 이는 곧 천연법과 인정법의 구분이라고 볼 수 있다.<sup>62)</sup> 한편 천도교 윤익선은 자연법과 인정법을 법리(法理)와 법률에 배당하고 법리가 자연의 원리원칙이라면 법률은 인류단체의 규칙임을 강조하였다.

법리라 함은 만상을 통어하여 존재한 자연의 원리원칙을 말함이고, 법률이라 함은 인류단체

58) 유길준, 장인성 옮김, 『서유견문』, 137-138.

59) 『황성신문』, 1903. 4. 9.

60) 김효전, 『근대 한국의 국가사상: 국권회복과 민권수호』, 379.

61) 유길준, 허경진 옮김, 『서유견문』, 133.

62) Ibid., 133.



로부터 제정하고 또는 인지케 하는 것으로 인류단체가 공동생활의 목적을 따르는 행위의 규칙을 말함이라.<sup>63)</sup>

법리는 법률의 상위 개념으로서 “법리를 연구하여 얻은 지식으로 그 사회의 적합성을 목적으로 하여 법안을 결정”하는 것이기에 법리가 중시된다. 윤익선이 말한 법리와 법률은 유길준이 구분한 천연법과 인정법에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성준은 그의 『법학통론』에서 도(道)와 법(法)을 구분하여 윤익선이 말한 법라법률과 유사한 개념으로 쓰고 있다. “사람은 만물의 최령자(最靈)로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性)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에 무한한 자유를 구유하는 것”인데 이는 “안으로는 性情의 시비에 구속되지 않고 밖으로는 타인의 욕망에 좌우되지 않는 것”이라 하였다.

사람은 자신의 의향에 따라 선악간에 행동을 취하고, 그 의사에 반하는 사상과 행위는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강요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반드시 복종해야 할 두 가지 책무가 있다 하여 이를 내부적 자유와 외부적 자유로 나누었다. 여기서 내부적 책무를 도(道)라 하고 외부적 책무를 법(法)이라 지칭하였다. 도는 사람의 심의(心意)에 관계되고 법은 드러난 외부의 행위를 가지고 규구(規矩)하는 것이기에<sup>64)</sup> 도와 법의 관계는 자연법(自然法)과 인정법(人定法)의 관계와 유사하다. 그리고 자연법은 통의로서 누구나가 동일하게 인지하는 감정이기에 생각의 여지없이 즉시 자각할 수 있는 자연의 대법으로 이해되었다.<sup>65)</sup>

## 결론

개화기 한국에 소개된 서구 국가사상은 루소의 사회계약론보다 블룬칠리의 국가유기체설이 주류를 이루었다. 서구 국가론은 유길준의 『서유견문』과 『정치학』을 시작으로 논의되었고, 1904년 『국민수지(헌정요의)』와 그 후 쏟아져 나온 『만세보』, 『대한자강회월보』 등 각종 신문과 잡지, 그리고 김성희, 나잔김상연, 안종화, 정인호 등의 자역술에서 블룬

63) 윤익선, 「법리와 법률」, 『법정학개』 18; 이영록, 「애국계몽운동기 자연법사상의 구조와 특징」, 707에서 재인용.

64) 유성준, 『법학통론』, (경성: 박문사, 1905), 2-4.

65) Ibid., 6-7.

철리의 국가론이 주목되었으며, 민주공화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기존연구는 유길준의 서유견문과 헌정연구회에서 발간한 국민수지를 근거로 들어 개화기 국가담론이 입헌군주제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고, 전근대적 국가주의 색채를 강하게 띤 것으로 규정해 왔다. 즉 전제정치와 다를 바 없는 “국민 없는 국가주의”로서 폄하하고 개화기 신 국가수립운동에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러나 유길준의 저술을 꼼꼼히 살펴보면 유길준은 입헌군주제만이 아니라 민주공화제를 중시했으며 군민공치(君民共治)와 국민합치(國民合治)를 혼용시켰다. 『국민수지』 또한 국가란 ‘민중의 합성체’요 주권 역시 ‘민중의 합성력’이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는 민권운동적 성격이 강했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로는 신국가수립운동에서 민주공화제가 선호되었는데, 당시 대다수 지식인들은 불문철리의 국가유기체론에 주목하여 국가개념을 논의하고 민주공화제를 제기해나갔다. 불문철리의 국가론이 중국의 량치차오나 일본의 가토 히로유키, 아리가 나가오 등을 통해 전해졌을지라도 그들은 한국이라는 역사적 배경과 처한 상황 속에서 국가론을 논의하였다. 예를 들어 국가 개념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가족을 확장한 대가족주의로 인식하거나, 일정한 영토에 사는 인민의 결합체로서 거래공동체로 의미 짓는 것 등이 그것이다. 원래 전통적인 개념에서 ‘國’이란 ‘君’을 의미했고 군주는 나라님이라 불려 나랏일은 나라님이 할 일이지 민중 자신들과 무관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당시 국가관념이 강조되고 애국이 강조되었던 것도 민중들로 하여금 국가의 주체로 나서고 민권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국가사상 수용에서 천부인권의 자연권이 주목되었는데, 종교적 차원에서 최초로 조선에 서구 자연법이 수용된 것은 천주교의 전래에서 찾기도 한다. 그러나 법률차원에서 자연법이 처음 소개될 때는 유가의 용어가 차용되었고 자연법이 성법(性法)으로 번역되어 유포되었다. 性은 하늘이 부여한 인간 본성을 뜻했고, 천연성으로 이해되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진 자유자재한 권의(權義)를 의미했다. 이는 소유권, 생명권, 절대자유권을 강조하는 서구 인권개념이라기보다는 ‘자유자재한 천연성’을 펼쳐야 할 권리를 의미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한 것이 “국가독립의 권리”였다. 국가의 독립은 하늘이 내린 권리로서 이 역시 침노당할 수 없는 신성한 것이었다. 3.1운동 당시 조선인의 자주민임과 독립국임을 2천만 민중의 합심으로 선언한 것도 신국가수립운동의 ‘자연권’과 ‘합중공화’의 계승이었다. 천도교 33인 대표 중의 한 사람이었던 박준승도 일제의 신문시 “나도 날 때는 독

립국 국민”이었다고 하였다. 국가독립의 권리를 찾기 위해 독립운동은 당연히 인권적 차원에서 해야 하는 것이었다. 기존연구는 근대 신국가수립운동을 국가주의 프레임과 제왕적 입헌군주제로 성격을 규정하여 그 성과를 폄하해왔고, 3.1운동과 분리시켜 역사적 의미를 단절시켜 왔다. 이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민수지』, 『대한매일신보』, 『대한자강회월보』, 『대한협회회보』, 『법정학계』  
『제국신문』, 『천도교회월보』, 『한성순보』, 『헌정연구회취지서』, 『황성신문』
- 김경희, 「서구 국가사상의 수용과 건국헌법」, 『오토피아』 31, 2016, 41-66.
- 김도형, 『대한제국기의 정치사상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1994.
- 김동택, 「중세적 인식론의 전환과 새로운 담론의 모색: 근대 국민과 국가개념의 수용에 관한 연구」, 『대동문화연구』 41, 2002, 357-388.
- 김효전, 『근대 한국의 국가사상: 국권회복과 민권수호』, 서울: 철학과현실사, 2000.
- 나잔·김상연 역술, 『국가학』, 1906.
- 노기남 편집, 『漢文問答』, 서울: 가톨릭출판사, 1959.
- 단재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 편, 『단재 신채호 전집』 6, 천안: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 박노자, 「국가 유기체론과 개명전제(開明專制)」, 『인물과 사상』 83, 2005.
- 오상준, 『초등교서』, 경성: 보문관, 1907.
- 우재이명구박사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우재 이명구박사 화갑기념논문집』, 서울: 고시연구사, 1996.
- 유길준, 김태준 옮김, 『서유견문』, 서울: 박영사, 1976.
- 유길준, 장인성 옮김, 『서유견문』, 서울: 아카넷, 2017.
- 유길준, 한석태 역주, 『유길준, 「정치학」』, 마산: 경남대학교출판부, 1998.
- 유성준, 『법학통론』, 서울: 박문사, 1905.
- 이건상 외, 『일본의 근대화와 조선의 근대』, 서울: 모시는사람들, 2013.
- 전봉덕, 『한국근대법사상사』, 서울: 박영사, 1981.
- 정혜정, 「3.1운동과 국가문명의 ‘교(敎)’: 천도교(동학)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40-4, 2018.
- 최기영, 『한국근대계몽운동연구』, 일조각, 1977.
- 최기영·박맹수 편, 『한말 천도교 자료집』 2, 서울: 국학자료원, 2014.
- 최종고, 『한국의 서양법 수용사』, 서울: 박영사, 1982.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조소양편(1)』,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 石田雄, 『일본근대사상사における法と政治』, 東京: 岩波書店, 1976.
- 尾川昌法, 『人權のはじまり: 近代日本の人權思想』, 京都: 部落問題研究所, 2008.
- Bluntschli, Johann Caspar, *The Theory of the State*, Kitchener: Batoche Books, 2000.

## 한국 근대 서구 국가사상 수용에서의 정치체제 유형과 자연권

정혜정

개화기 한국에 소개된 서구 국가사상은 루소의 사회계약론보다 불륜칠리의 국가유기체설이 주류를 이루었다. 불륜칠리의 국가론 수용은 민권과 국권회복의 방편으로 수용된 것이지 그대로 직수입된 것은 아니었다. 국가 개념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가족을 확장한 대가족주의로 인식하거나, 일정한 영토에 사는 인민의 결합체로서 거래공동체로 의미 지어, 나라타일을 민중 자신들과 무관하게 여겼던 낡은 의식을 타파하고자 했다. 또한 천부인권의 자연권은 하늘이 부여한 인간 본성을 뜻했고, 천연성으로 이해되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진 자유자재한 권의(權義)를 의미했다. 이는 소유권, 생명권, 절대자유권을 강조하는 서구 인권개념이라기 보다는 자유자재한 천연성을 누리고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한 것이 “국가독립의 권리”였다. 국가의 독립은 하늘이 내린 권리로서 이 역시 침노당할 수 없는 신성한 것이었다. 3.1운동 당시 조선인의 자주민임과 독립국임을 2천만 민중의 합심으로 선언한 것도 이러한 신국가수립운동의 ‘자연권’과 ‘합중공화체제’의 계승이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서구 국가사상, 신국가수립운동, 정치체제, 자연권, 공화

## Natural Rights and Political System to Establish a Modern New State in Korea

Jung, Hyejung

The 3.1 movement was a world historical movement that created the Republic of Korea by proclaiming independence and Freedom of Joseon. However, this was an interlocking movement of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state that was aimed at the realization of natural rights and republic in the first decennium 1900s. Precedent researches have depreciated the performance of the patriot enlightenment movement during this period by characterizing it as a nationalistic frame and a royal constitutional monarchy. And they have diluted historical significance by separating it from the 3.1 movement.

This study focused on the fact that the moral basis of the 3.1 movement have inherited the movement to establish a new state in the early 1900s. In addition, I examined how the intellectuals of the present day, accepted and transformed the national thought of the West. And I examined how this is ideologically augmented focusing on natural rights and republicanism. In the beginning 1900s, the movement to establish a new state by introducing and developing Bluntschli's nationalism was a civil rights movement and a republican movement. Thus, the state as a whole is based on the nature of humanbeing and it aims to move toward the world community.

**Key Words:** National Thought, Establishing a Modern New Nation, Political System, Natural Rights, Republic

---

논문 투고일	2019년 9월 30일
논문 수정일	2019년 11월 3일
논문게재 확정일	2019년 10월 25일

---